



KERI Insight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 유럽사례를 중심으로 -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
(young7@kmu.ac.kr)

최병일

매일경제신문
(choi0704@mk.co.kr)

본 연구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우리 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방만한 복지지출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정책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지출은 투자적 성격의 교육이나 의료관련 항목의 지출보다 소비적 특성을 갖는 노령연금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본 연구에서는 남유럽 국가의 잘못된 복지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복지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북유럽 모형,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모형, 시장 시스템을 강조한 앵글로-색슨 모형,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중해 모형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북유럽 모형의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정부 재정을 긴축해 흑자 재정을 유지해왔다. 또,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의욕 저하, 거시경제의 유동성 과잉과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점과 절충안을 탄력적으로 찾아왔다. 반면 지중해 모형의 국가들은 복지지출 특히 노령연금 등 소비적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고령화사회 혹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유럽 국가들이 노인 복지와 관련한 지출을 증가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의 노령연금 지출 규모는 OECD 국가들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노령연금 제도가 발달한 북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연금 지급액은 급격히 증가해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과도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출범 이후 유로존(Eurozone)에 편입되면서 대외경쟁력이

악화돼 경상수지가 악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노령연금을 비롯한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거시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남유럽 국가들의 선심성 복지 지출은 실물경제와 정부 재정에 연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외환위

기'라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경제는 환율 정책의 중요성과 외환보유고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 사례를 교훈삼아 복지정책과 연금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외환위기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I. 문제 제기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빈곤 문제, 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 발생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 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더욱이 2020년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이 증가해 향후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현재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복지공약 없어도 향후 복지 비용은 이미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여건 변화는 재정의 악순환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
- 만약, 향후 우리 경제의 세입 기반이 약화되어 지속적인 정부의 세수 증대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대외신용도의 하락으로 국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파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와 같은 인식하에 우리의 복지제도에 대한 향후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파생될 경제 위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충족지표, 국민행복지표, 복지수요지표, 경제활력지표 등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함.
 - 그러나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고, 지표마다 일관된 순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¹⁾
 - 일련의 복지 정책이 결정되면 관련 복지 혜택이나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합의된 복지 정책들이 지속가능하며, 실현

1) 기존연구들을 보면, 여유진 외, 「노르드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9)에서는 노르드 모델과 유럽대륙 모델의 복지국가 형성과정 및 최근 변천의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음. 김중훈 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에서는 인구현상의 국제적 공통 추이와 국가의 개별성에 대한 분석, 인구경험의 선행 및 동행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강유덕 외,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12)에서는 유럽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을 같은 경제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홍석표 외,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12)에서는 선도적으로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유럽각국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이 가능한 사회정책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음. 안순권,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2006.12)에서는 앵글로색슨형, 북유럽형 및 유럽대륙형, 지중해형 모델 등 4대 유럽복지모델 유형별 경제·사회정책의 성과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음.

가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들의 복지예산 비중과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공한 복지 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북유럽의 복지정책과 실패한 복지 국가로 분류되는 남유럽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와 문제점을 비교하고,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한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내 복지수준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로부터 복지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고민해 보고자 함.

-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I. 복지정책과 경제성장

1. 바람직한 복지정책과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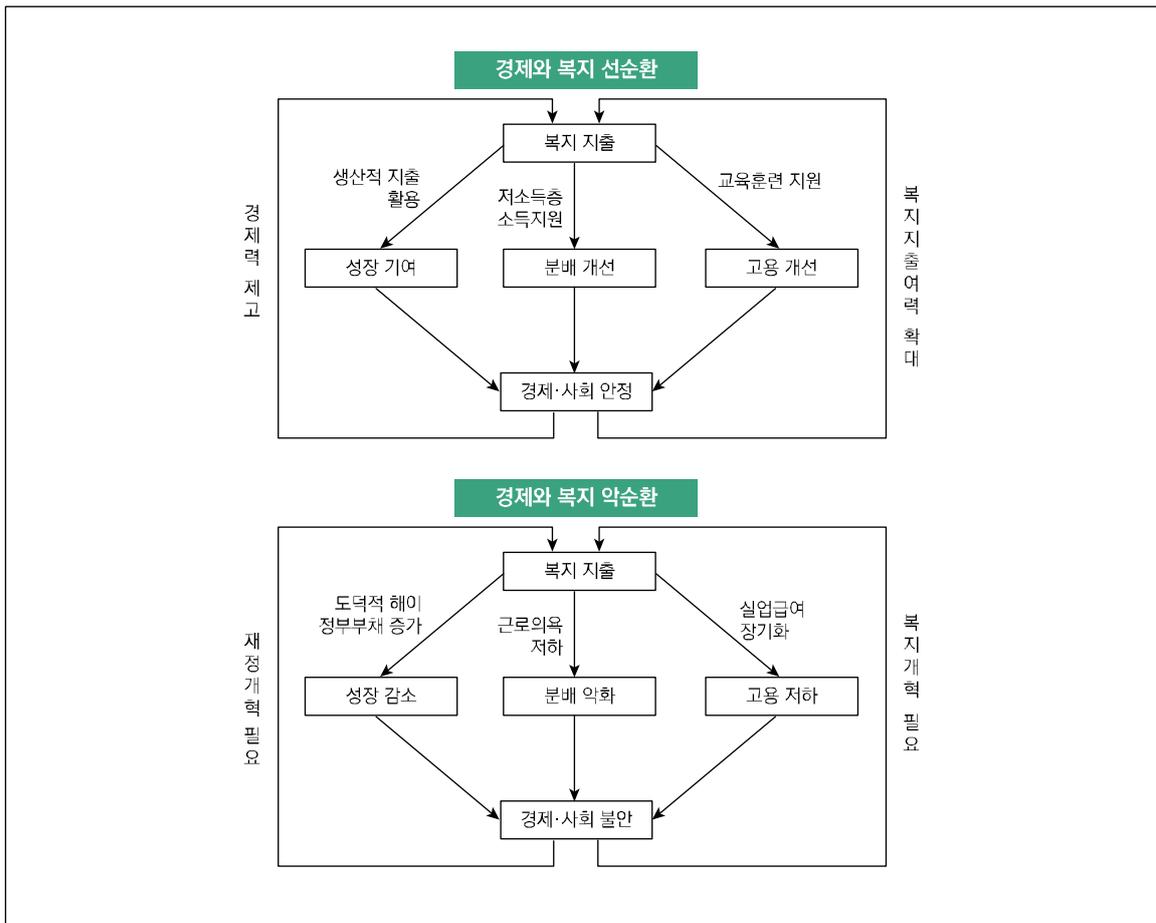
□ 복지정책은 지출규모와 유형, 자원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영향을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게 됨.

○ 따라서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복지지출은 유효수요의 창출, 인적투자 및 경제 활동참여율 증대, 사회갈등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투자적 지출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근로의욕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그림 1〉 복지지출규모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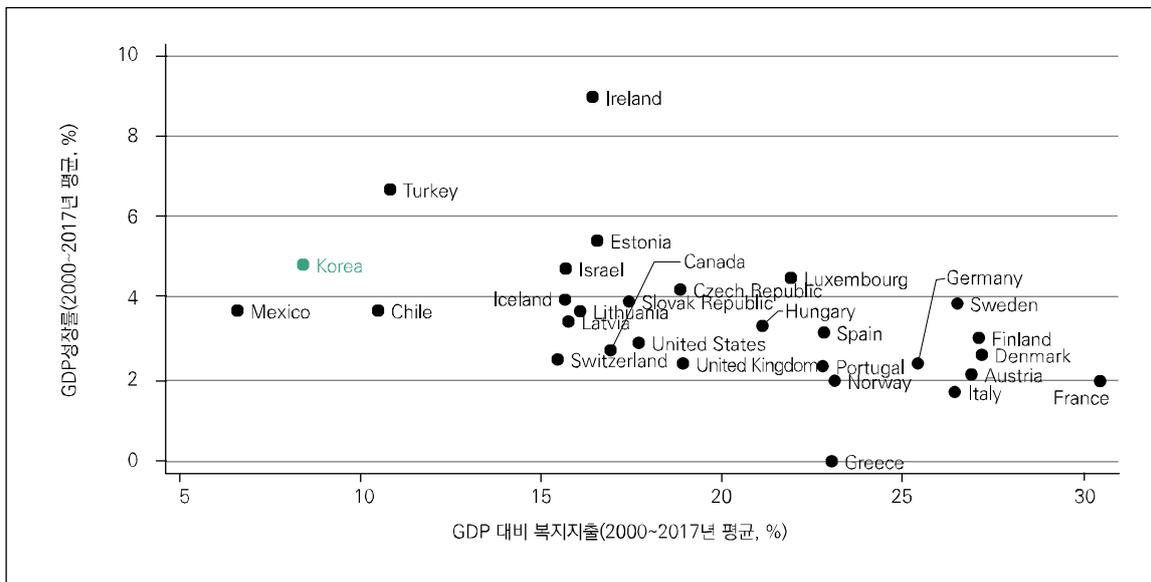


- 남유럽국가들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 중의 하나로 복지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히, 재정위기 원인이 되었던 남유럽국가들은 장기간 저성장, 고실업으로 근로의욕이 하락하였음.
- EU(유럽연합) 결성 당시 각 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기준은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60%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평균 85%를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규모는 170%,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30%를 초과하고 있음.

2. 정부지출과 경제성장

- 적극적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통합이라는 공통된 거시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재정상태와 복지지출로 인해 복지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달라졌음.

〈그림 2〉 복지지출규모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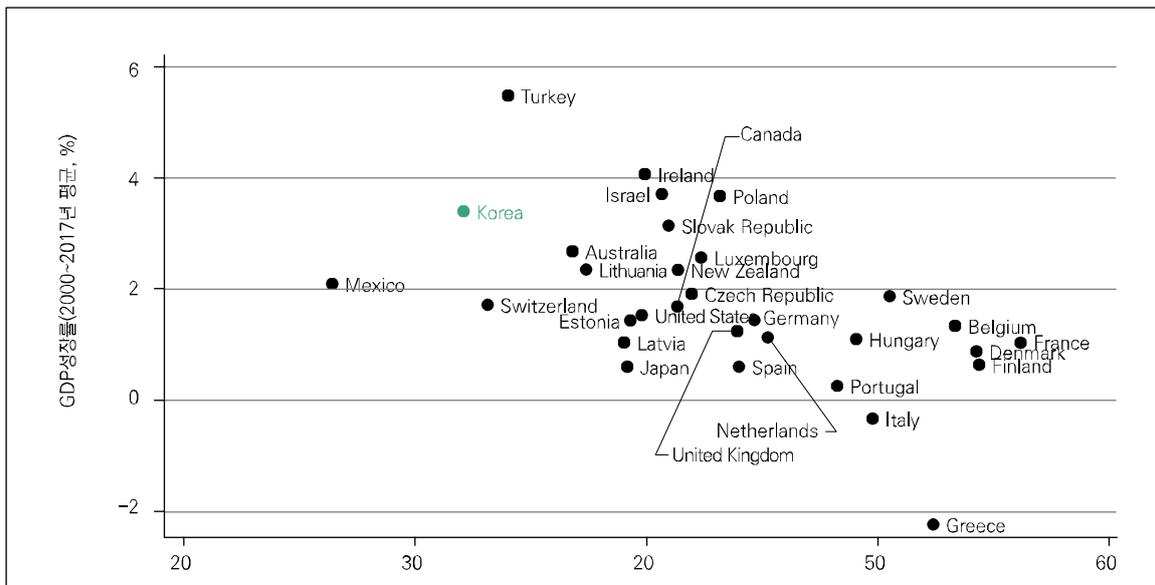
□ 단순회귀분석 결과 OECD 회원국 중에서 복지지출 비중과 경제성장은 통계적으로 1%²⁾ 유의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반적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적은 한국, 멕시코, 칠레 등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출 역시 경제성장률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정부 지출과 경제성장률 간 선형관계를 가정했을 때 정부지출 1% 증가 시 경제성장률은 0.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정부지출규모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2) t_value -3.318

3)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t-value -3.927

III. 유럽복지의 정책 유형 및 지출의 변화

1. 유럽복지의 정책 유형

□ Sapir(2005)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유럽 국가들의 복지모형을 분류함.

○ Sapir 복지 모델의 효율성은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형평성은 소득평등, 빈곤 감소로 측정함.

○ 유럽의 복지정책 유형은 크게 1) 북유럽 모형, 2) 대륙 모형, 3) 지중해 모형, 4) 앵글로색슨 모형으로 구분함.

1) 북유럽 모형

□ 시민주의적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 정책이 그 특징임.

○ 국민들이 동일한 사회보험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통합한 복지 모형으로 4개 유형(북유럽 모형, 대륙 모형, 지중해 모형, 앵글로색슨 모형) 가운데 가장 강한 평등주의(형평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완전 고용을 목표로 복지와 근로 연계를 강화하는 복지정책으로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자들의 빠른 구직활동과 여성의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4개의 모형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대화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의 확대와 축소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연금 및 각종 급여 개혁과 병행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복지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였음.

- 1998년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Laws)을 개

정하여 현금보상(Cash Benefits)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상태에 있도록 수급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음.

- 또한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을 축소하였음.

○ 스웨덴의 경우도 1992년 금융위기 이후 기초연금을 최저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축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주택 보조금을 축소하고, 그 자격심사를 강화하였음.

2) 대륙 모형

□ 국가주의, 가족주의, 비스마르크적 사회보험이 특징

○ 남성 소득을 기반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소득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하였음.

- 여성의 독립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가족 급여를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있음.

- 연금제도가 직업군과 긴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직업에 따른 소득 차이가 연금 급여로 이어지고 있음.

○ 독일은 통일 이후 장기 불황국면에서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최대 3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축소하였음.

- 또한 노령연금의 수령 대상을 기존 65세에서 2년 연장하여 67세로 상향 조정하였음.

3) 앵글로색슨 모형

□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이 특징

○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 계층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가 중심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엄격한 소득심사를 바탕으로 낮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 이전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 사회 복지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됨.
-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경제·복지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음.

4) 지중해 모형

- 앵글로색슨 모형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대륙 모형과 같이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이며, 앵글로색슨 모형의 노동 정책과 유사한 특징이 공존하고 있음.
 - 대륙 모형과 같이 기여금에 기초한 연금 지급은 직군별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임.
- 남성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고용 규정의 부작용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소득의 격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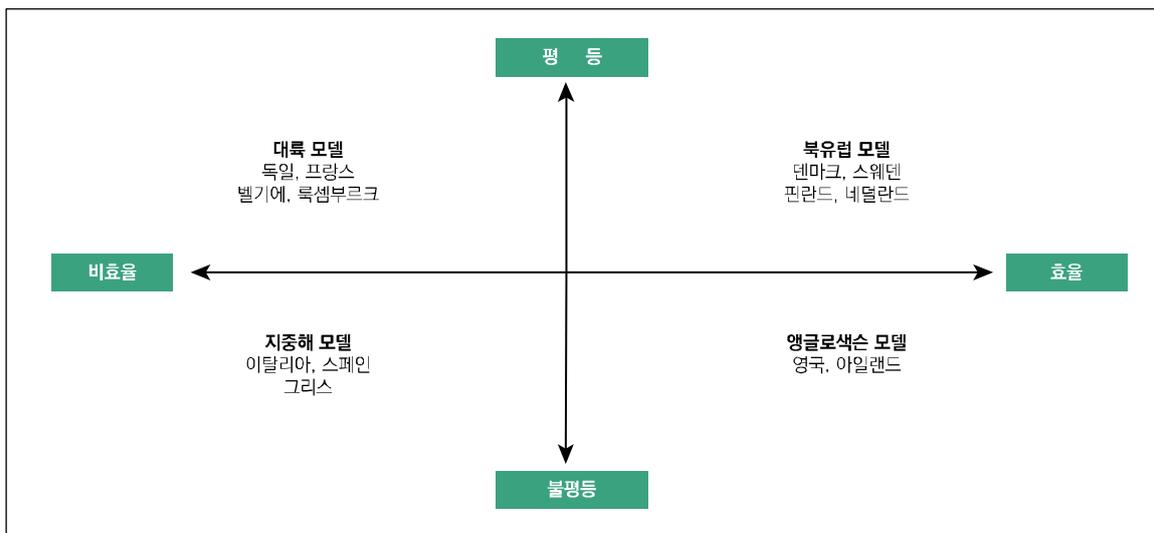
- 보건부분의 경우 북유럽 모형과 같이 보편주의적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효율적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가장 많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2. 유럽복지의 지출변화 추이

1) OECD 회원국 복지예산 비중 변화추이

- OECD 회원국 복지 예산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분석 결과,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복지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복지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복지 예산 비중은 1990년 12.5%에서 2016년 32.6%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나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증가 속도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가파른 것으로 확인됨.

〈그림 4〉 복지모델 유형과 유형별 국가



〈표 1〉 OECD 회원국 복지예산 비중 추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호주	30.5	30.9	35.9	36.4	44.6	44.0	43.6	49.0
오스트리아	-	-	-	47.1	50.3	50.7	52.2	54.3
벨기에	-	-	-	48.0	47.9	48.9	53.0	54.2
캐나다	-	34.1	35.2	38.2	38.0	40.8	40.2	43.1
체코	-	-	-	30.4	43.7	42.8	45.3	46.5
덴마크	-	-	-	43.6	45.1	49.2	50.5	52.9
에스토니아	-	-	-	-	38.0	38.2	45.2	44.0
핀란드	44.4	46.9	48.7	47.3	47.1	48.7	49.9	53.2
프랑스	43.4	48.4	48.7	52.0	53.6	54.1	54.7	56.2
독일	-	-	-	46.1	56.7	56.8	54.8	56.9
그리스	-	-	-	36.1	38.3	43.6	47.4	47.2
헝가리	-	-	-	-	42.6	44.3	46.8	41.7
아이슬란드	-	-	-	-	35.4	38.3	34.3	36.5
아일랜드	-	-	-	43.0	42.7	47.7	37.7	53.6
이스라엘	-	-	-	-	33.7	33.3	37.3	39.1
이탈리아	-	-	-	40.8	48.7	51.3	54.4	56.6
일본	-	-	-	-	-	48.5	53.2	55.8
한국	-	-	12.5	14.0	18.3	20.8	26.5	31.6
라트비아	-	-	-	0.0	41.2	35.9	42.8	41.1
루지아나	-	-	-	-	39.0	40.1	45.8	45.4
룩셈부르크	-	-	-	48.9	49.5	52.4	52.4	53.2
멕시코	-	-	-	-	-	29.0	29.0	27.2
네덜란드	-	-	-	41.8	45.1	47.8	36.9	39.5
뉴질랜드	-	-	39.2	43.6	49.0	47.6	43.0	49.5
노르웨이	-	-	-	44.7	48.5	49.3	49.0	50.6
폴란드	-	-	-	45.6	48.1	46.8	45.0	-
포르투갈	-	-	-	37.6	43.3	47.7	47.2	49.9
슬로바키아	-	-	-	38.2	33.7	39.7	42.7	39.4
슬로베니아	-	-	-	11.0	47.8	47.7	47.5	47.4
스페인	-	-	-	46.7	49.7	53.3	54.2	56.3
스웨덴	-	-	-	48.1	50.2	52.2	51.7	53.1
스위스	-	-	-	41.3	41.1	46.2	45.7	46.7
터키	-	-	-	-	-	-	32.4	34.9
영국	-	-	38.3	43.8	45.3	44.5	47.3	51.2
미국	37.2	34.3	35.7	40.5	42.2	43.0	45.1	50.0
평균	36.4	36.5	37.7	40.6	43.3	44.5	45.0	43.1

자료: OECD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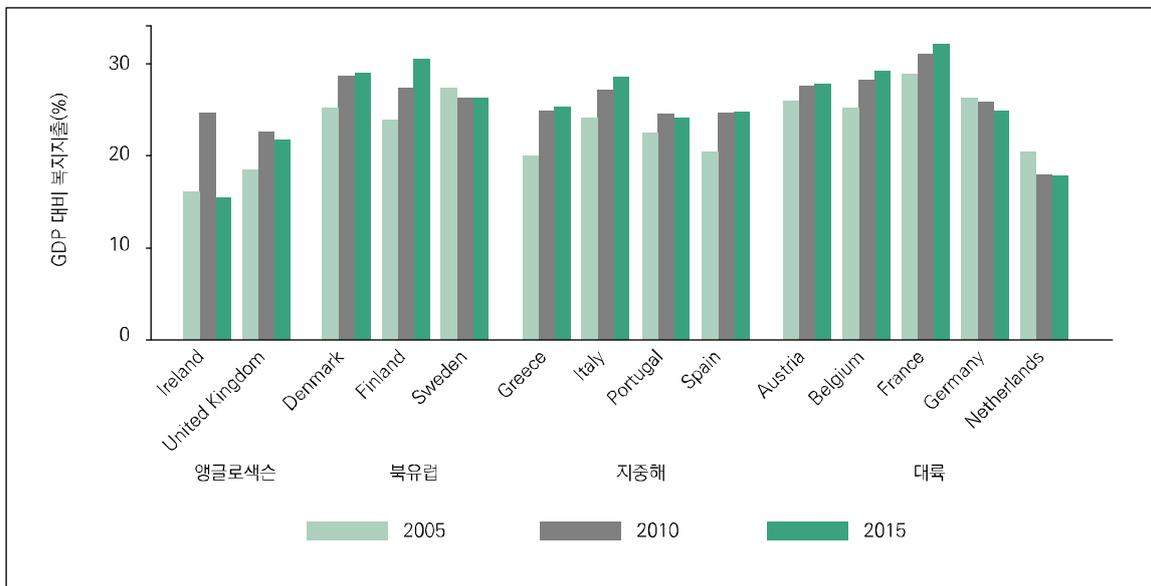
2) 유형별 복지지출 변화추이

- 앵글로색슨 모형에 속한 아일랜드의 경우 2010년 유럽재정 위기 당시 복지 지출 비중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2005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륙 모형(독일과 네덜란드)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 지출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중해 모형의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들은 모두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은 1980년대 GDP 대비 15% 미만으로 유럽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00년도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10년 유럽재정 위기 당시에는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0%를 상회하여 대륙 모형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대륙권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북유럽(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1992년 정부 지출이 GDP의 60%를 상회했으나 대대적인 재정 개혁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EU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변화 추이



〈그림 6〉 복지지출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OECD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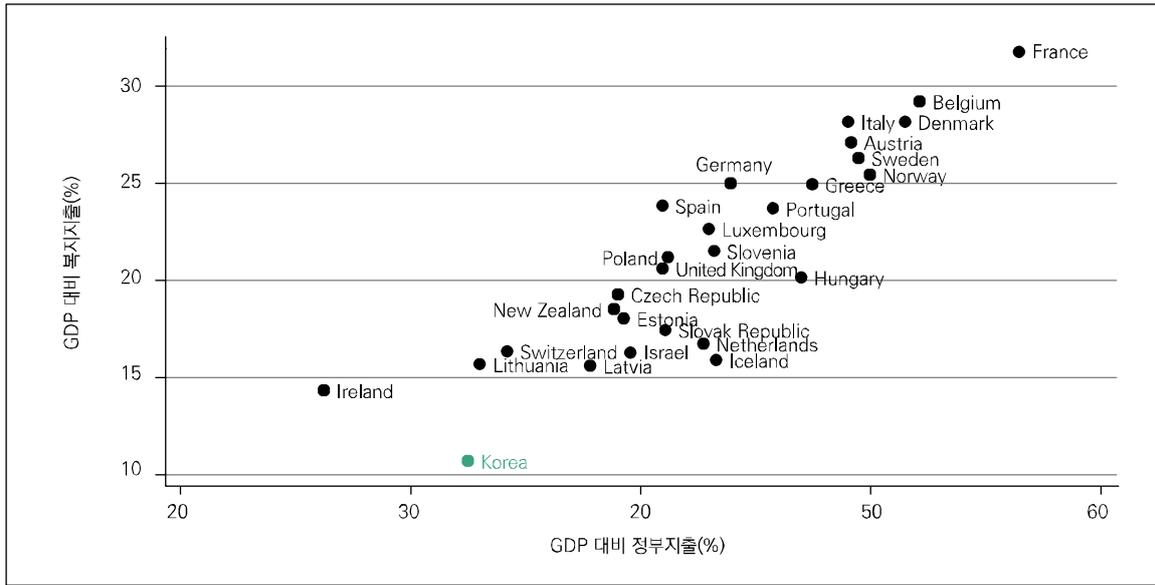
3) 복지지출과 정부지출

- 복지지출과 정부지출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⁵⁾
 - 한국, 칠레, 멕시코의 복지지출과 정부지출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는 정부지출 규모에 비해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국가 평균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50% 수준이나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는 각각 55.0%, 53.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57.5%, 58.2%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지출 비중은 32.8% 가장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4)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대륙권(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남유럽(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어권(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5) 복지비용과 정부지출을 회귀분석 결과 1% 유의수준(t-value 10.9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정부지출 및 복지지출의 상관관계(2017년)



- 2000년대 이후 북유럽 모형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 북유럽 모형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복지지출 확대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 대륙 모형의 국가들의 경우 평균 2.2%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적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중해 모형의 경우 같은 기간 글로벌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한 결과 적자폭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표 2〉 국가별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2017년 기준)

(단위: %)

국가	복지지출/정부지출	복지모형
Ireland	54.5	앵글로색슨
United Kingdom	50.6	앵글로색슨
Denmark	55.0	북유럽
Finland	53.3	북유럽
Norway	50.7	북유럽
Sweden	52.9	북유럽
Korea	32.8	한국
United States	49.8	미국
Belgium	56.0	대륙
France	56.3	대륙
Germany	57.0	대륙
Luxembourg	52.5	대륙
Greece	52.5	지중해
Italy	57.5	지중해
Portugal	51.9	지중해
Spain	58.2	지중해
OECD 평균	50.0	-

〈표 3〉 주요 국가별 재정수지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1999-2007 기간 평균(GDP 대비)	2007년	복지모형
Ireland	1.6	0.2	앵글로색슨
United Kingdom	-1.5	-2.8	앵글로색슨
Denmark	2.5	4.8	북유럽
Finland	3.9	5.3	북유럽
Sweden	1.4	3.6	북유럽
Belgium	-0.3	-0.1	대륙
France	-2.6	-2.7	대륙
Germany	-2.2	0.2	대륙
Luxembourg	2.5	3.7	대륙
Italy	-2.8	-1.6	지중해
Portugal	-4.1	-3.1	지중해
Spain	0.3	2.0	지중해

□ 북유럽 모형은 조세시스템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북유럽 국가의 조세수입은 GDP 대비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세율은 60%를 초과하고 있음.

○ 앵글로색슨 모형은 상대적으로 민간보험의 의존도가 높고, 조세수입과 사회보장부담금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앵글로색슨 모형의 조세 수입은 GDP 대비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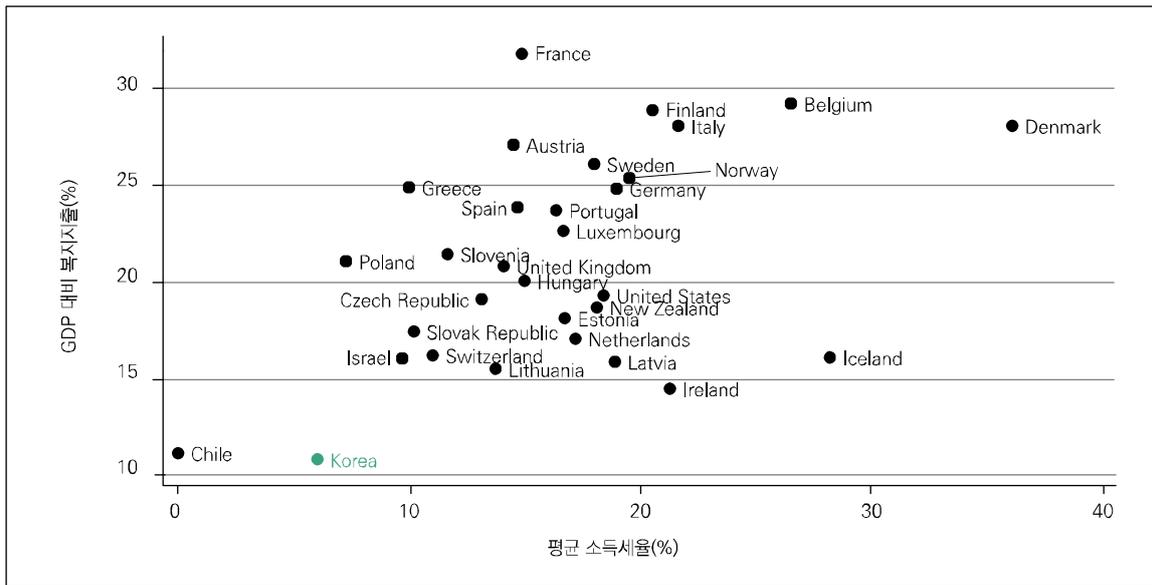
○ 대륙 모형과 지중해 모형은 위 두 모형의 중간 수준으로 사회보장부담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조세와 민간 보험의 의존도는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복지유형별 재원조달

국가	복유립	앵글로색슨	대륙	지중해
소득세	고	저	중	저
사회보장부담금	중/저	저	고	중
사회보험재원	조세	조세	분담금	분담금
민간 사회보험 비중	저	고	중	중

자료: Dieckhoener and Peichl(2009)

〈그림 8〉 평균 소득세율과 복지지출의 상관관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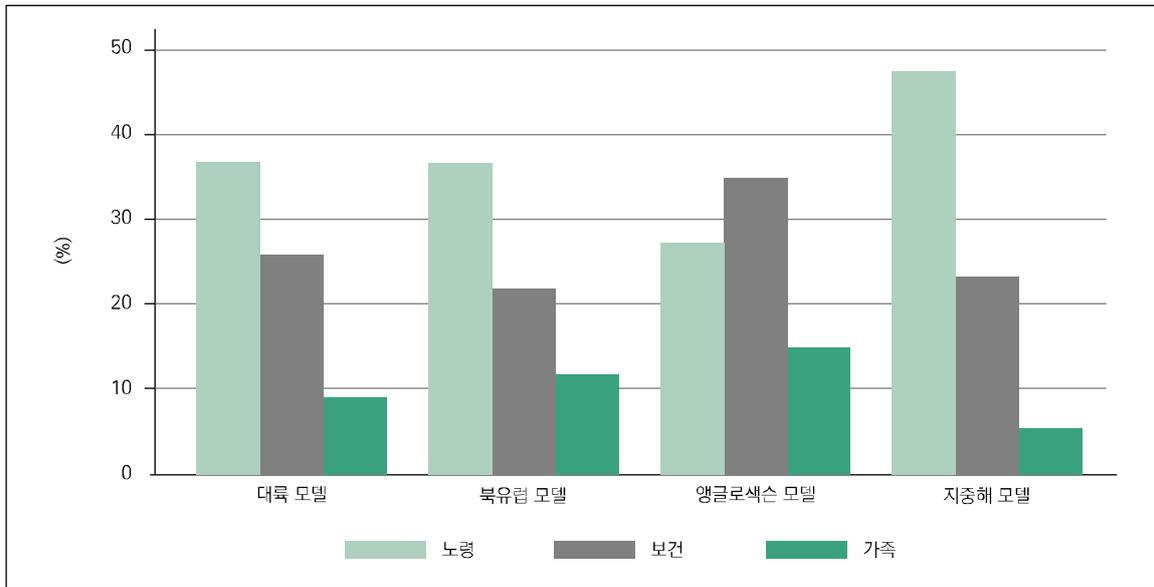
□ 〈그림 8〉은 소득세율과 복지지출의 상관관계를 분석

-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상관관계를 분석 1% 유의수준에서 (t-value 2.864) 유의미하게 세율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소득세율 대비 GDP 복지지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은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에 비해 복지지출 규모가 작은 것을 나타냄.

3. 유형별 복지지출 현황

- 2017년 기준으로 유럽 지역의 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노령연금으로 나타났음.
- 대륙 모형과 복유립 모형의 노령연금 비중은 대략 37%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9〉 복지지출 항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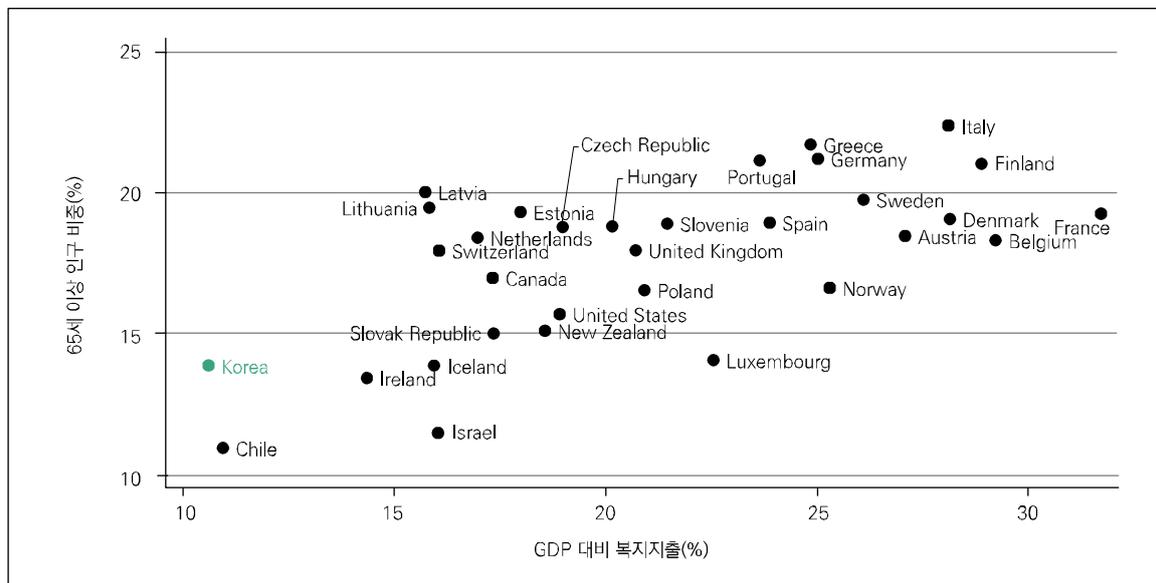
- 대륙 모형의 경우 유럽 지역 가운데 노령 연금이 복지 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4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노령연금 비중이 가장 낮았던 앵글로색슨 모형의 경우 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는 항목은 보건이 34.9%로 유럽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북유럽 모델 국가의 경우 다른 모델에 비해 무능력급여,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순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높았음.
- 지중해모델의 경우 노령연금의 비중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등에 대한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OECD 회원국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
- 1980년대 고령화율이 11.3%였으나 2014년에는 16%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

〈표 4〉 복지모델 유형별 복지지출의 항목별 비중(2017년 기준)

(단위: %)

국가	노령	유족	무능력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합계
아일랜드	3.6	0.3	1.4	5.3	2.2	0.6	1.5	0.5	0.1	15.5
영국	6.5	0.1	1.9	7.7	3.5	0.2	0.2	1.5	0.1	21.6
앵글로색슨 모델	5.1	0.2	1.6	6.5	2.8	0.4	0.8	1.0	0.1	18.6
핀란드	12.2	0.8	3.6	5.7	3.1	1.0	2.4	0.7	0.9	30.4
스웨덴	9.1	0.3	4.1	6.3	3.5	1.3	0.3	0.4	0.9	26.3
덴마크	10.2	0.0	4.4	6.7	3.4	2.1	0.0	0.7	1.5	29.0
북유럽 모델	10.5	0.4	4.1	6.2	3.4	1.4	0.9	0.6	1.1	28.6
그리스	14.3	2.7	1.9	4.8	1.0	0.3	0.5	0.0	0.1	25.4
포르투갈	11.6	1.9	1.8	5.9	1.2	0.5	1.0	0.0	0.2	24.0
이탈리아	13.6	2.6	1.8	6.7	2.0	0.5	1.0	0.0	0.2	28.5
스페인	9.3	2.3	2.4	6.5	1.2	0.6	2.0	0.1	0.2	24.7
지중해 모델	12.2	2.4	2.0	6.0	1.4	0.5	1.1	0.0	0.2	25.7
네덜란드	6.1	0.1	3.4	2.7	1.5	0.8	1.5	0.5	1.2	17.7
독일	8.3	1.8	2.1	8.1	2.2	0.6	0.9	0.6	0.3	24.9
프랑스	12.7	1.7	1.7	8.8	2.9	1.0	1.6	0.8	0.8	32.0
오스트리아	12.2	1.7	2.1	6.5	2.6	0.7	1.1	0.1	0.6	27.7
벨기에	9.1	1.8	2.9	7.9	2.8	0.7	2.9	0.2	0.7	29.2
대륙 모델	9.7	1.4	2.4	6.8	2.4	0.8	1.6	0.4	0.7	26.3

〈그림 10〉 복지지출규모와 65세 이상 인구비중 간의 상관관계(2017년)



- 유럽의 경우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곧 진입할 예정
- 1980년대 중반 노인인구 비중이 11% 수준에서 2004년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 진입
- 유럽이 비슷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중해 지역의 노령연금 은 모든 모형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1980년대 북유럽 모델의 평균 노령연금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에서 2015년에는 9.7%로 2%p 상승
- 그러나 지중해 모델의 평균 노령연금 지출규모는 1980년대 GDP 대비 4.7%에서 2015년에는 평균 12.2%로 노령연금 증가 속도가 GDP 대비 7.5%p로 빠르게 상승
- 1990년대, 2000년대 유럽 주요국들은 노령연금 제도를 개혁,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
- 스웨덴은 1990년대 기초노령연금 폐지, 소득연금 확정, 기여식 연금 전환
- 독일의 경우 2000년대 리스터연금(민간연금)제도 확대, 연금자동조정장치 도입
- 프랑스는 2000년대 연금급여 산정방식 변경, 기여연금 제도를 확대

〈표 5〉 국가별 고령화율⁶⁾(2018년 기준)

(단위: %)

국가		65세 인구/총인구	
앵글로색슨 모델	Ireland	11.7	
	United Kingdom	18.2	고령화 사회
북유럽 모델	Denmark	19.3	초고령화 사회
	Finland	21.4	초고령화 사회
	Norway	16.9	고령화 사회
	Sweden	19.8	고령화 사회
대륙 모델	Belgium	18.7	고령화 사회
	France	19.7	고령화 사회
	Germany	21.4	초고령화 사회
	Luxembourg	14.2	고령화 사회
지중해 모델	Greece	21.8	초고령화 사회
	Italy	22.6	초고령화 사회
	Portugal	21.5	초고령화 사회
	Spain	19.2	고령화 사회
기타 유형	Korea	14.3	고령화 사회
	United States	16.0	고령화 사회

6) 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

- 전반적으로 연금 지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연금소득대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OECD 평균 70.1%에서 2018년 58.6%로 감소
- 남유럽 국가들의 연금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그리스의 경우 2007년 연금소득대체율이 11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 재정위기 대대적인 연금개혁으로 2018년 51.1%로 큰 폭 하락

〈표 6〉 국가별 연금소득대체율

(단위: %)

국가	연금소득대체율(2018년)	연금소득대체율(2017년)	복지 유형
Ireland	35.9	38.5	앵글로색슨
United Kingdom	28.4	41.1	앵글로색슨
Denmark	70.9	86.7	북유럽
Finland	64.2	58.8	북유럽
Sweden	53.4	64.0	북유럽
Norway	51.6	69.3	북유럽
Belgium	66.2	63.0	대륙
France	73.6	63.1	대륙
Germany	51.9	58.0	대륙
Luxembourg	90.1	96.2	대륙
Spain	83.4	84.5	지중해
Greece	51.1	110.1	지중해
Italy	91.8	77.9	지중해
Portugal	89.6	69.2	지중해
EU 28개국 평균	58.6	70.1	-

IV. 포퓰리즘 복지사례

1. 포퓰리즘 복지정책 사례와 문제점

1) 그리스

□ 1974년 민주주의 수립 당시부터 서유럽식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고, 1982년까지 공공교육 확대, 직업교육 도입, 최저임금 및 연금 인상, 기여 실적이 없는 농부에 대한 사회부조연금 도입과 같은 복지제도가 확대되었음.

○ 1983년 국가보건서비스(ESY)의 제도화로 그리스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편적인 접근이 제공되었음.

○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정당(PASOK) 정권은 그리스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후견주의를 타파하지 못했으며 분절화된 사회보험제도도 통합시키지 못했음.

- 오히려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직업그룹을 포함시켰으며, 어떤 국제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고소득층에 대한 낮은 과세 수준을 인상하거나 이들의 잘 알려진 탈세 관행을 철폐하려 하지 않아 국가 전체적으로 빈곤 완화 및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는 미미하였음.

○ 그리스는 호황기에 쏟아진 복지 수요를 재정 파탄 위기에도 외채로 메우며 국가부채를 키웠고 2008년 퇴직자들이 받은 공적연금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9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0%보다 월등히 높았음.

- 2001~2011년 그리스 국민이 부정 수급한 공적연금도 80억 유로(약 11조 2,000억 원)에 이르렀음.

○ 이러한 관행들로 인해 그리스 복지 국가는 빈약한 재정의 경로 의존적인 궤적으로 접어들었고, 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의 분절화된 특성은 개선되지 않았음.

○ 위기 이전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EU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

- 그리스의 실업급여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수급 자격이 이전 근로실적과 엄격하게 연계되어 있어 신규 가입자 및 청년층 실업자 또는 기여 실적이 미미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

- 보편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 관련 급여는 이전 기여실적과 연계된 급여 기간 및 수급자격 기준이 적용되어 대다수의 장기실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최대 1년 동안만 급여가 지급되었음.

- 비공식 근로자나 기여실적이 미미한 실업자 또는 신규 청년층 실업자들은 공식적인 장기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구직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능력형성 프로그램들의 경우 기간제한이 있어 해당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으며, 재원 조달은 주로 EU 등의 외부기관에 의존함.

- 장애 관련 급여 및 가족 관련 급여도 EU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세 자녀 이상 대가족에 대한 급여는 그나마 보통 수준이었고 폐지된 기여금 기반의 사회주택제도는 주로 소수의 도시근로자에게만 저금리 주택대출을 제공하였으며, 기여실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장기 복지 지원은 무보험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 매우 적은 액수의 비기여연금뿐이었음.

- 그리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적인 최저소득 보장제도가 없는 유일한 EU 국가로 남아 있음.

○ 그리스 사회복지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보건의료서비스 부문과 노령·유족연금임.

- 2009~2010년 그리스의 연금 지출은 GDP의 13%에 달했고 정부 지출의 3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2009년까지 의료비 지출은 GDP의 10% 수준으로, 사실상 연금 및 보건의료 부문이 정부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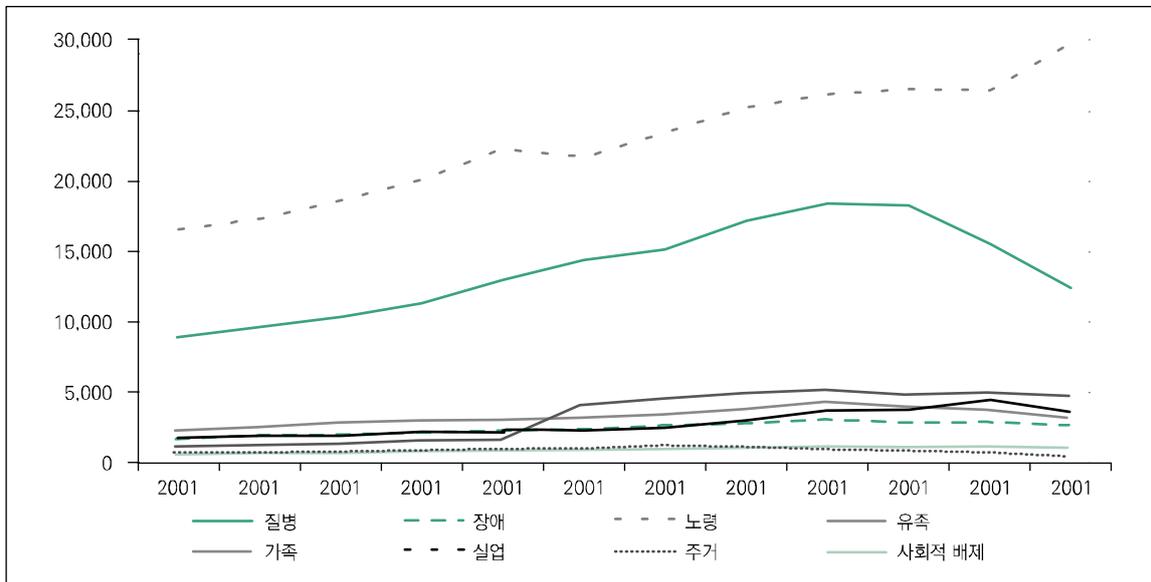
- 이에 비해 가족지원 관련 공공지출은 최근에서야 GDP의 1%를 넘어 섰고,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은 GDP의 1%를 넘은 적이 없음.
- 연금과 보건의료 부문 지출은 2009년 국가 부채 위기 발생 전까지는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 연금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연금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국가 부채 위기가 깊어지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된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임.
- 연금과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에 대한 지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 및 유족 급여 지출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 반면 실업, 가족 지원 및 사회 주택에 대한 지출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음.

○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80년대 1인당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했고, 1990년대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보다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임.
- 1981년 그리스의 EEC 가입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회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복지지출은 EU 15개국 평균의 80%를 밑도는 수준임.
- 1인당 GDP는 위기 발생 이전에 EU 15개국 평균을 거의 따라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1〉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추이(2001~2012)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임완섭 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12.31.

〈표 7〉 EU 15개 회원국의 1인당 사회복지지출 순위(1980~2011년)

(단위: USD)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룩셈부르크	5,600	6,130	8,170	10,040	11,970	15,000	16,270	15,590	15,140
오스트리아	4,580	5,210	5,940	7,170	8,310	9,030	9,940	10,090	10,030
덴마크	5,070	5,450	6,360	8,050	8,220	9,050	9,520	9,650	9,780
벨기에	4,880	5,670	6,240	6,840	7,460	8,250	9,420	9,480	9,760
스웨덴	5,290	6,310	6,990	7,840	8,220	9,400	9,500	9,500	9,490
프랑스	4,180	5,500	6,050	7,340	8,030	8,750	9,220	9,390	9,440
핀란드	3,210	4,390	5,500	6,500	6,380	7,670	8,610	8,970	9,080
독일	5,330	5,870	6,400	7,200	7,940	8,400	8,880	8,990	8,850
네덜란드	5,520	5,830	6,720	6,780	6,660	7,640	8,450	8,730	8,700
아일랜드	2,040	2,890	3,040	3,860	4,390	6,110	8,440	8,260	8,070
영국	2,840	3,740	3,660	4,840	5,450	6,790	7,810	7,520	7,470
이탈리아	3,380	4,240	5,070	5,470	6,460	7,030	7,430	7,510	7,460
스페인	2,350	2,820	3,890	4,470	5,030	5,720	7,070	7,180	7,210
그리스	1,730	2,640	2,810	3,060	3,910	5,140	6,220	5,900	5,820
포르투갈	1,150	1,210	2,000	2,840	3,950	4,880	5,400	5,490	5,340

자료: 임완섭 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2.31.

2) 이탈리아

□ 1925년 시작된 파시즘 초반에는 경제회복을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상정함.

○ 경제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경제를 통제하고 질서 및 정권에 대한 합의를 얻어 내기 위하여 복지를 일종의 도구로 이용함.

○ 노동조합이나 사회기금제도를 폐지하고 정권 지지성향의 소득보장 운영조직을 설립함.

- 1929년에는 파시스트 정부와 바티칸이 공공 부조에 대해 논의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책은 파시스트 정부가 담당하고 바티칸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부조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작

□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복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1950~1970년대는 이탈리아 복지체계의 황금기로 평가됨.

○ 복지지출의 증가는 주로 연금제도와 보건정책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금급여를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현 수급세대의 부담을 차세대로 미루어둘 수 있게 하였음.

- 1952년에는 최저연금 보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1969년부터 빈곤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연금이 도입되었으며, 보건제도는 기존의 자선조직을 공공제도로 편입시키고 운영기금의 규모는 확대되었음.

- 보건의료제도의 적용대상도 점차 확대되어 1960년대 후반 인구의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였음.

□ 방만한 재정지출과 경제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이탈리아 경제성장세는 점차 둔화

○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정권획득에 목적을 둔 정부는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관대하게 지불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보건의료에 편중된 복지정책을 시행

- 후견주의 문화와 결합되어 정치계급이 사회후원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자원을 오·남용하는 빌미를 제공
 - 아동 및 노인문제, 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부문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음.
 -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는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복지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자원 낭비를 유발
 -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복지혜택의 이원화, 직업범주별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복지체계의 통일성 저하, 차별적인 분배구조 등으로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초래
 - 이탈리아 경제는 1990년대에는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면서 과거 무분별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증가
 - 이탈리아는 1970년대 중반부터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출산율이 유지 되고 있음.
 - 205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3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보건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와 연금지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현 부양부담의 차세대 이전 문제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정부의 긴축적 복지체제개혁으로 2013년부터 GDP는 성장세로 돌아서고 2015년에는 1.2%의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면 균형예산이라는 목표달성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나, 현재 수준의 사회지출을 유지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감축, 조세정책 개혁 등을 통한 공공지출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임.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 부담, 공공부채의 증가와 낮은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수준임.
 -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이탈리아 복지체계는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택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에 한정된 사회지출삭감인데, 이미 복지수급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책의 시행 및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임.
- ### 3) 스페인
-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독재 체제 이후 본격적인 복지 정책이 시작됨.
 - 스페인의 복지정책은 소득 지원의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지출 비중이 큼.
 - 70년대 스페인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2.1%로 같은 시기 서유럽의 평균 2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음.
 - 1996년 사회보장체제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톨레도 협약을 시행
 - 안정적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연금의 재원을 분리하고, 연금 수령 연력을 상향 조정
 - 2007년 노인과 여성복지를 위해 양성평등법 제정
 - 선거 및 기업의 고위직에 일정 수준의 여성 비율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장치 마련
 -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은행의 부실로 은행부분의 재정이 투입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

- 스페인의 재정 악화는 지방 정부의 방만한 재정 부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심화됨.
 - 90년대 지방 선거 공약 경쟁으로 지방 정부가 무상의료, 교육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 정부의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
- 스페인은 유럽 통합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령 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높은 의료 분야의 복지 지출을 유지해 재정 위기가 심화됨.
- 2011년 스페인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개혁안을 최종 합의
 -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2년 연장, 급여 산정 대상기간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
 - 이와 같은 개혁으로 2050년까지 GDP의 약 3.5%p 가량의 재정지출 절감 예상
- 2012년에는 공공보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종 개혁안 승인
 - 디지털 의료 및 공공서비스 예산 편성으로 최소 7억 유로 가량의 재정절감 기대
 - 만성질환 또는 소득 및 자산수준을 고려하여 의약품에 대한 비용 지불

4) 소결

- 그리스를 위시한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공통된 요인은 정부가 국가경제의 실력 이상으로 돈을 지출했기 때문임.
 - 남유럽 국가들은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방만한 사회보장 지출과 공무원 급여를 통제하지 못했고 이들 지출은 통상적으로 '법'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한 번 시행되면 '경직성 경비'를 넘어 '의무지출'이 되며, 경제력이 '의무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재정위기는 현실화됨.
- 2009년 말부터 남유럽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PIGS)들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었는데,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2중적 경로에 의해 촉발되었음.
 - 하나는 경제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EU의 무리한 단일통화(euro) 통합에 따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입임.
 - 하지만 이는 재정위기를 격발시킨 '방아쇠'에 지나지 않고 재정위기의 최대의 잠재 요인은 방만한 복지제도 운영이었음.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지출, 공공부문 임금' 등 의무지출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임.
- 2009년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중은 각각 13.6%와 115.1% 이어서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증세와 감세 혜택 중단, 정부 지출 줄이기 등 잇따라 재정 긴축으로 회귀하고 있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협에 시달리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재정 적자를 줄이며 헌법에 균형 예산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및 스페인 등 PIGS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남유럽 발 글로벌 위기는 단순히 복지정책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 거시 경제적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가 되면서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외환 시장이 흔들리면서 전체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 것이므로 복지와 경제파탄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임.
 - 경상수지는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재정수지는 국가가 지나치게 재정을 산

만하게 운영해서 발생한 것임.

- 경쟁력은 국민들의 생산성 저하가 주요 원인인데 여기에는 국민들에 대하여 생산참여에 대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고 이의 주요 이유는 바로 유인이 없는 복지시스템임.
 - 즉, 복지시스템이 국민들로 하여금 생산부문에 참여하지 않고 복지프로그램에 머물게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려고 한 금융·재정정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복지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거나 혹은 과도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금융·재정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복지지출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물론, 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정부가 깊은 생각 없이 도입한 것도 국가파산의 한 이유가 됨.
 - 과잉 복지지출로 경상수지나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에 참여하거나 복지수혜를 줄여야 하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거의 모두 실패하게 됨.

2. 유럽의 복지정책 개혁 사례

1) 스웨덴

- 전통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의 세계 제1의 복지국가로 이들은 높은 누진과세와 각종 보조금제도를 통하여 각계의 수입을 재분배해서 빈부격차를 줄여 왔음.
- 그러나 1980년대 금융자유화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및 주식가격이 급등하였으나, 1980년대 말 수출둔화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붕괴하였음.
- 여기에는 스웨덴의 대기업들이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을 이유로 외국으로 이전한 것도 한 이유임.

- 예를 들면 1980년대 말까지 법인세율은 52%, 고소득층의 최고 한계소득세율이 87%였음.
- 1992년 보수당 중심의 우파 연립정부가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위기 대응패키지를 사민당과 합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스웨덴의 복지개혁은 본격화됨.
- 우파 연립정부 집권 시 아동수당 인하, 학비보조기간 축소, 병가수당 축소, 실업 급여에 대한 소득 대체율 대폭 하향 등 복지제도에 대한 축소 조치가 시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노동공급 제고와 함께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함.
 - 여기에는 법인세 인하, 고용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세의 사용 부담 축소 등이 포함됨.

2) 덴마크

- 덴마크 정부는 고용시장 참여 촉진을 중심으로 복지제도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복지개선 추진하였음.
-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복지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금 및 병가제도 등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개혁 추진
- 2009년부터 청년 실업자를 해소하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개혁을 추진
 - 청년층의 실업자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
 - 일반 실업자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 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기존 실업급여 지원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 2009년 덴마크 의회는 병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병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2006년 6월 덴마크 정부는 연금제도 및 조기퇴직제도의 개혁안을 발표·시행하였고, 이후 2011년에는 2006년 개혁안의 개정안을 발표
 - 2006년 연금 개혁안에 따라 조기퇴직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연장되어 2022년에는 62세로 연장하며, 일반 퇴직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2023년에는 66세로 연장되고 2025년에는 67세로 연장
 - 2011년 연금 개혁안은 조기퇴직연령 연장 시기를 2018년 62세가 되도록 앞당기고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64세로 연장
 - 2011년 고령 장애 연금(senior disability pension)을 2014년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 2011년 적록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기존의 예산체계를 변경하여 자유롭고 동등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접근성과 예방의 강화를 목표로 2012년, 2013년 보건 의료부분에 대한 예산 변경
 - 고용주가 지불하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비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폐지
 - 임신치료와 임신치료 분야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폐지
 - 예방 기금에 대한 예산 삭감을 폐지하고, 근로 환경청과 협력부서의 예산을 증액
 - 일부 식료품과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3) 독일

- 사민당이 1990년대 후반 집권하면서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고 부의 분배를 추진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추구하였음.
 - 예를 들면, 기민당의 주요 개혁조치였던 병가수당 축소, 중소기업 해고금지 철폐, 연금개혁 및 세제개혁을 철회하였음.
 - 그리고 임금인상, 대기업 세금인상 등을 추진하였고 이는 바로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음.
- 독일정부는 고용경직성 완화와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급여 축소 등의 하르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새로운 의료개혁을 시행
 - 높은 실업율과 지속적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르츠법 I-V(2003~2005년)을 통한 노동시장정책의 개혁이 단행됨.
 - 하르츠 개혁의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축소 및 수급요건 강화,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부조의 폐지, 실업 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한 실업급여II 신설(조세재원), 고용보호조항을 완화하여 고용창출을 유도
 - 이후 메르켈 정권에서는 법인세 축소를 통한 기업 투자여건 개선,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 등을 축소하는 복지분야 개혁을 단행
- 독일의 의료보험은 인구고령화,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감소, 일부 보험 급여 인상, 약제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공존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들을 시행

- 본인부담금 인상, 공적질병금고간의 경쟁 강화,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공존 체제로의 도입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등 의료보험제도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의료개혁이 단행
- 2011년에는 고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민간의료보험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개혁을 시행

4) 네덜란드

□ 1980년대 네덜란드의 협의 민주주의의 재구축과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부활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혁신과 개혁의 동력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혁신과 개혁은 크게 3가지 차원(임금조정과 조세개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복지개혁)에서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음.

□ 임금조정과 조세개혁

- 바세나르 협약은 다음과 같음.

- 노조는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노동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실질임금의 삭감을 받아들이고, 자본은 해고를 가능한 자제하되 탄력적 근로시간 조정과 시간제 고용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활성화와 노동비용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자원의 적극적 투자에 힘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

- 바세나르 협약 이후 1996년까지 평균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약 20% 삭감됨.

-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연금 등 사회보장 급여 또한 축소되었고, 임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등 노동비용 감소는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지면서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짐.

- 1993년 경제 위기가 재현되자 임금인상 억제와 함께 단체협상의 분권화와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주 38시간 → 주 36시간), 인적자원 투자 확대, 근로 소득세 부담 경감 등에 합의

- 1998년에 '고용유연성 및 안정법'(lex Wet)이 도입되었고 해고통지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간소화하고,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인한 해고 절차를 단순화시킴.

- 기간제 고용을 기존의 1회에서 최대 3년 한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고용계약으로 고용하도록 함.

- 임금억제는 부분적으로 세금 경감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1990년 포괄적인 소득세 개혁(법)이 통과됨.

- 이전의 9개 과세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단계세율이 72%에서 60%로 대폭 인하되었고, 이어 2001년, 노동당이 주도하는 콕(Kok) 2기 내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포괄적인 조세개혁이 단행함

- '21세기 재정계획'에 기초해서 최상위 2단계 세금 상한을 50%와 60%에서 42%와 52%로 인하했으나,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 17.5%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부담세도 인상시켜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조세부담의 무게 중심을 이전함.

- 이러한 2001년 조세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에서 근로로의 전환을 금전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네덜란드의 기적'은 일자리 없는 성장, 노동 없는 복지와 완전고용의 종말에 대한 예고로부터 출발했는데, 네덜란드 복지국가 개혁의 중심에는 '일자리,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라는 모토가 놓여 있음.

- 실업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 대신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추진되었음.

- 1990년에 그 첫 번째 단계로 ‘일자리 풀(job-pool)’ 제도가 도입됨. 이 제도는 취업 대상으로 간주되는 모든 장기 실업자와 3년 이상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 혹은 대안적인 비영리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장기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완전 법정 최저임금의 115%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특별기여감면제도를 실시하였고 장기실업자 고용 감면제도를 도입
- 1994년에 보조받는 ‘열등한’ 노동시장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정규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의 초점을 전환함.
 - 소위 ‘멜케르트 고용정책(Melkert-I-jobs)’을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장기 실업자를 위한 4만 개의 추가 고용 기회를 만들 계획을 수립
- 청년 고용정책으로 1992년에 청년고용보장법(JWG)을 통해 1년에 6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18세에서 22세 사이 모든 대졸자와 실업 청년에게 기간제(fixed-term) 취업 자격을 제공함.
- 2015년 1월 1일부터 근로 및 부조법, 보호고용법과 핸디캡이 있는 청년을 위한 장애급여법이 참여법으로 통합됨.
 - 동법은 일할 수 있지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 7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핸디캡이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2006년 장애보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워크페어와 웰페어 간 구분이 이루어졌는데, 영구 장애인 등을 제외한 24만 명의 Wajong 수급자들이 재검사를 받았고 부분 장애인의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의 75%에서 70%로 낮아짐.
- 고용주와 정부는 2026년까지 사회부조 수급자들

과 산재 장애인들에게 추가적인 일자리를 보증키로 하였고, 2015년 참여법에서는 사회부조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로를 확대하였으며, 복지 수급자들이 하루 3시간 통근하더라도 가용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함.

-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정책은 소득 상실의 보상에 초점을 두는 소극적 접근에서 근로연계와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접근으로 이동함.

□ 복지제도 개혁: 장애급여를 중심으로

- 1970년대까지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칭송받게 했던 네덜란드의 장애급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고강도의 개혁 대상 일순위에 올랐고 1987년 실업보험의 전면 검토를 시작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두 개의 주요한 탈출 경로로 지목되고 있던 장애보험과 상병급여를 억제하는 개혁이 이루어짐.
-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질병과 장애의 위험에 대한 책임성을 국가로부터 개별 고용주에게로 이전했고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피용자에게 근로 재통합 의무를 부과함.
- 1996년 초반 상병급여법(Sickness Act)은 거의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임시 근로자와 재택근무자들에게 공적 상병급여법(Sickness Act)은 폐지되었으며, 1996년 3월 고용주 상병급여 지급법의 도입으로, 고용주들은 그들의 아픈 피용자들에게 1년 동안 경상 임금의 70%를 지불함.
- 1998년에 산업 장애 수를 줄이기 위해 장애보험의 차등보험 및 경쟁 도입법이 도입되었음. 이 법은 고용주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시도였지만 기대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함.
- 2001년, 도너위원회는 장애급여에 대한 급진적

검사(overhaul)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에서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에 대해서만 공적 장애급여를 활용가능 하도록 제안했는데, 부분 장애인 은 경험률에 기초해서 강제 민간 고용주 보험에 의해 커버됨.

○ 2002년에 실시된 급여진입장벽강화법을 통해 근로할 수 없는 첫 해 동안 피용자와 고용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였고 2004년 사회협약을 통해 상병급여 수준을 2년 동안 이전 임금의 170%로 제한함.

○ 장애보험법과 근로능력법에 의한 수급 유입자 수는 2000년 10만 명에서 2006년 2만 1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장애 위험은 동 기간 동안 1.55에서 0.46으로 낮아졌음.

- 특히, 급여진입장벽강화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새로운 진입자의 수는 9만 2천여 명에서 5만 9천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2만 여명으로 급감함.

○ 개혁의 결과 공적 사회지출의 급감은 극적이었고 GDP 대비 장애에 대한 공적사회지출은 1990년 6.3%를 정점으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8년에는 2.9%로 낮아졌음.

5) 영국

□ 1970년대 후반까지 노동당의 주요 정책인 산업 국유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정책을 도입해 왔음.

○ 예를 들면, 복지제도의 강화, 완전고용정책, 노조보호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조와의 정책협약이 경제전반에 고비용과 비효율을 야기함으로써 1976년 외환위기를 발생시켰고 결과적으로 보수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졌음.

□ 1997년 블레어 수상의 노동당이 '제3의 길'로 재집권하면서 정부는 최고 소득세율의 인상을 반대하고 최저소득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 1999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낮게 책정하였음.

□ 이어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 기간시설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그 결과 영국은 더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영국병은 사라지게 됨.

V. 결론 및 제언

- 지중해 국가들의 경우 충분한 자원 마련 없이 복지 재정지출을 증가가 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
 - 글로벌 금융 위기 2010년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연쇄적인 신용등급 하락과 재정위기 악순환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자, 재정 건전성이 불량한 국가를 중심으로 위기가 심화
 -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으로 주요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 직면. 각국정부의 신용도와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침. 이는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급증으로 이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재정적자 수준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로써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 남유럽 사례와 같이 적자재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실물 경제의 충격으로부터 취약한 경제구조를 나타냄.
 - 장기간의 재정적자는 정부의 이자 비용 증가, 국채 금리 상승, 신용 경색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남유럽과 같이 경기 침체, 유동성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됨.
 - 양극화 심화와 고령화 사회 시대에 복지 지출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적자 심화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인구학적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 특히 연금정책을 결정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 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선택된 연금 정책은 국가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북유럽 지역과 같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노령연금을 비롯한 복지 지출의 탄력적 운용 필요

〈참고 문헌〉

- 강성원. 2011. 「무상복지의 장기비용추계」. KERI 정책제언 11-02. 한국경제연구원.
- 강유덕 외, 2013. 12.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유덕·김균태·오탈현·이철원·이현진. 2012. 「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연구보고서 12-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유덕·김균태·오탈현·이현진. 2009. 「유럽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3권 4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유덕·오탈현·이철원·이현진. 2009.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3-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공계순·서인해. 2006.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31호, pp. 77~102.
- 김득갑·박현수·김정근·이종규·김경훈. 2012.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CEO Information』, 제847호. 삼성경제연구소.
- 김시흥. 2007. 「유럽사회모델과 유럽연합의 사회적 차원」. 『유럽연구』, 제25권 2호.
- 김원식, 2011. 11. 「해외 사례로 본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 경총 『경영계』, 11월호.
- 김은경. 2007. 「비스마르크언 사회안정망 개혁의 정치경제학 프랑스와 독일의 비교」.
- 김인춘.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인춘. 2010. 「유럽통합과 자본주의 다양성: 북유럽과 남유럽의 '유럽화' 비교」. 『유럽연구』, 제28권 3호, pp. 176~211.
- 김종범. 2011. 「세계경제위기와 남유럽복지모델의 상관성: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9권 3호, pp 33~62.
- 김종훈 외, 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학노. 2004.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3호, pp. 411~434.
- 김홍중·신정완·이상호. 2006.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06-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아일보, 2013. 8. 16. 「복지병 고친 북유럽 vs 만성 복지병 남유럽... 한국은 어디로」.
- 박형수·전병목.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 송지원, 2017.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 『국제사회 보장리뷰 2017 겨울호 Vol. 3』.
- 안순권. 2006.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연구 06-17. 한국경제연구원.
- 안종범·안상훈·전승훈. 2010.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pp. 293~324.
- 여유진 외,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 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9
- 이석원. 2006.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적정규모 산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1호 (2006 봄), pp. 271~291.
- 이재웅, 2011. 10. 「포퓰리즘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줄이자」.
- 이중섭. 2007.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재정정책변화: 1991년 스웨덴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8권, pp. 167~198.
- 이현진. 2010. 「최근 독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과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11-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완섭 외, 2016. 12.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김용하·이지현·최연혁·임재영.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경엽 외, 2013. 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KERI 정책제언 13-02』.
- 최성은 외, 2012. 12. 「유럽의 복지개혁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 홍석표 외, 2009. 12.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준성·윤여협. 2007. 「유럽식 복지모델의 특징과 문제점」, 『사회과학논총』, 제9집, pp. 297~323.

Esping-Anderson, Gsta. 1999. *The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eitger, Bernhard. 2001. *The Scope of Government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Kiel Working Paper No. 1034, Kiel: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IMF. 2009. "Fiscal Rules: Anchoring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Public Finances". Fiscal Affairs Department.

OECD. 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OECD.

OECD. 2006. "Projecting OECD Health and long term core expenditure: what are the main driver?".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477.

Sapir, Andre. 2005. "Globaliz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Paper presented at ECOFIN Informal Meeting in Manchester, 9 September 2005.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